

목 차

저출산대책포럼 창립 의의와 발전 방향	박하정 · 1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김두섭 · 5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과 정책적 함의	이삼식·최효진 · 31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	박정한·배지숙 · 58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 77
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경신 · 107
The 2008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Paulin Straughan · 129

저출산대책포럼 창립 의의와 발전 방향

박하정*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이나 수단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18세기 중상주의시대에는 정치·경제·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규모의 증가를 강조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모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자,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 증가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주장하였다. 18세기 맬서스주의자(Malthusianism)는 결혼 연기나 금욕의 도덕적 억제 등을 통한 출산기피보다 가난·질병에 기인한 사망과 범죄·전쟁 등을 통한 인간에 의한 제거라는 자연법칙에 의한 인구 억제를 강조하였다.

19세기 초 이래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는 고출산률-저사망률에 의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피임법에 의한 인구 억제를 주장하였다. 즉, 신맬서스주의는 인간 생존을 위하여 자발적인 출산 억제를 강조하였다. 20세기 초 여성해방론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보급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가족계획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보편적 피임법 보급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고령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증가를 지향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망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출산수준마저 급격하게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국장

저출산대책포럼

낮아져 인구변천이론상 후기균형상태(post-equilibrium balance)에 진입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부부 2명을 자연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자녀수 2.1명을 의미한다)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1세기 초에는 1명에 근접한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평균수명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의 한국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겪을 것이다. 노동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세입기반은 감소하나 사회보장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에 인구 규모나 구조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정부는 사회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동 등 현재의 인구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Eldridge, 1979). 인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단기간에 생산(reproduction)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세대가 후세대를 재생산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생산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한 세대(인구학적으로 2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시·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기반 제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사교육비 포함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일-

가정 양립 곤란, 생식보건 저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가족, 경제, 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정책 등 제 분야에서의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저출산 대응 관련 학계 각각의 독립적인 연구도 중요하나, 복합적인 저출산현상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로서 저출산현상 대응과 관련한 ‘다학제적 공동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계가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저출산대책포럼의 창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저출산대책포럼은 학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다학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대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제언하는 학계와 정부 간의 의사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포럼은 저출산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포럼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모임으로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학문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저출산대책포럼은 2008년 9월 창립총회를 통해 탄생하였다. 저출산대책포럼은 한국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업적이 축적되어 온 기존의 저명한 18개 학회¹⁾들과 저출산 관련 2개의 단체²⁾들이 참여하고,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 50여명의 포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한 폭과 깊이를 겸비한 명실공히 다학제적 접근의 산실로서 외형과 내실 모두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2008년 하반기 2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

1) 유아교육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저출산대책포럼

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사회적 공감대를 공고화하여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충실성을 그리고 동시에 외연적으로 미래지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마련한 저출산현상에 대한 다학제적 공동 토론의 장인 저출산대책포럼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저출산 대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저출산대책포럼을 지역에서 순환 개최하여야겠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저출산대책포럼은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초적인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 포럼은 저출산대책의 성과가 학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정책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김두섭*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이 발표자료는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5-078-BS0004)의 결과인 김두섭(2007; Kim, 2009)을 재정리하고 자료를 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1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9월 30일)에서 발표.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과 정책적 함의

이삼식·최효진¹⁾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수준에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다소 반등하였다.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원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력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학적 요인분해와 로지스틱회귀모형이 적용되었다. 인구학적으로 2006년도 출산율 상승은 30대초 여성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면, 2007년도 출산율 상승은 30대초 여성의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여성의 결혼과 출산(첫째아)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두자녀관이 여전히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가치관이나 경기에 대한 인식은 둘째아 출산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나 모자건강관리지원정책은 향후 가임력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 이행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수반하므로, 가치나 인식에 비해 자녀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교육비지원, 모자건강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등 정책들이 개인적인 추가 출산 이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제1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9월 30일)에서 발표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사업 “최근의 출산율 증가 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2008)” 결과를 재정리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박정한·배지숙¹⁾

1. 서론

우리정부는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어 2006년에 출산율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개발하여 각종 출산장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7년 황금돼지 해에 출산율이 1.26으로 일시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적 요인 등과 같이 하루아침에 돌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 서구의 여러 선진국과 이웃의 일본에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지가 오래되어 우리보다 먼저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대체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나라는 없다(박정한 등, 2006).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명은 늘어나면, 젊은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율 회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의 질은 건강과 교육에 의하여 결정된다.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먼저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발달해야 한다. 또 모성이 건강해야 건강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일어나는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산모와 신생아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저출산대책포럼

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나 저출산 대책에는 이 문제를 간과 하고 있다. 연자는 출산율 감소로 야기되는 모성과 어린이 건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자보건 문제

가. 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신생아의 건강문제

(1) 저체중아 출생률 증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남·여 모두 결혼을 점점 더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한번 내지 두 번으로 제한하는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981년에 초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였는데, 2005년에는 각각 30.9세, 27.7세로 많아졌다. 따라서 출산 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여 1995년도 전체 출산아의 모성 연령이 74.4%가 30세 미만이었었는데, 2005년에는 48.4%로 떨어진 반면, 30세 이상의 산모가 25.6%에서 51.6%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출생시 체중이 2,500gm미만의 저체중아 출생률이 3.0%에서 4.3%로 증가하였고, 또한 다태아 출생률도 1.3%에서 2.2%로 증가하였다(그림 1).

출생시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생아의 생존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체중아는 2,500gm이상의 정상 체중아에 비하여 영아사망률이 20배 이상 높고(배영민, 2003; MacDorman & Atkinson, 1999; Mathews & MacDorman, 2007), 생존하여도 성인이 되었을 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고(Ijzerman et al, 2005; McNeill et al, 2004; Osmond & Barker, 2000), 정신지체 등 각종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도 더 높다. 따라서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의 질을 떨어트리는 중요한 보건문제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지난 20여 년 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 데 반해 실증적 연구의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에 주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여성의 임금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회피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한 출산율 자체를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출산율, 출산간격, 여성 임금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경신¹⁾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분배, 활용이 개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사람은 지식을 창출하는 핵심체이므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일차적인 요건이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국가 사회의 명암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활성화는 각 국가의 초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핵심요인은, 빈약한 물질 자원을 메워 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국민 개개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인구’란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할 바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며 기초자원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제 사회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적 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 출산을 하락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및 인구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다수의 정책들이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시점을 찾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킨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것과 같이, 인구의 문제도 이미 80년대부터 경계와 관심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시에 시행착오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정책 청사진을 보면,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면으로도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정책을 비롯한 제반 대안들이 과연 출산율 상승과 사회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그 수치상의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그동안 급격하게 변해 온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 틀과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혁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를 추정하고 여기에 정책적 비전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러한 면에서의 깊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즉시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학술적인 분석이 아닌 사유적이고 제언적인 형식의 글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2008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Paulin Straughan^{*}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국립대학교 교수)

^{**} 제2차 저출산대책포럼(2008년 12월 12일)에서 발표.

The 2008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Singapore's Response to Ultra-Low Fertility

A/P Paulin Straughan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

Overview

- A Brief History of Singapore's Pro-Family Policies
- Healthy environment yields healthy birth rate?
- Government family policies – Do they Work?
- Social & cultural barriers to fertility

2

Singapore Family Policies: Independence - 1999

YEAR	TFR	State's Response
1965	4.7	Population Control
1980	1.82	Continuation of population control
1987	1.62	First major introduction of pro-natalist policies

3

Singapore Family Policies: 2000 - 2008

YEAR	TFR	STATE'S RESPONSE
2000	1.60	Introduction of "Baby Bonus" and
2004	1.25	Enhanced Pro-Family Policies
2005	1.25	
2006	1.26	
2007	1.29	
2008	NA	New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4

2008 Marriage & Parenthood Package

- Multi-dimensional
 - Encourage marriage
 - Promote large families
 - Work life balance

www.family.gov.sg/MnP

5

Courtship & Marriage

- Role of state as match-maker
 - Merger of Social Development Unit (SDU) & Social Development Service (SdS)
 - SDU Accreditation Council
 - Growing private dating industry
- Facilitate home ownership
 - Housing grant for HDB flats

6

Promote Procreation

- Medisave Maternity Package
 - pre-delivery + delivery medical expense
 - Assisted conception procedures
- Co-funding of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 Third Child Priority Scheme

7

Raising Children

- Tax benefits
 - Working Mother's Child Relief
 - Grandparent Caregiver Relief
 - Parenthood Tax Rebate
- Baby Bonus Scheme
 - Cash gift + co-savings component
- Centre-based Childcare
 - Enhance quality, affordability & accessibility
- Concession on Foreign Maid Levy

8

Work-Life Balance

- 16-week paid maternity leave
- Paid child care leave (6 days per child under 7 years)
- Unpaid infant care leave
- 4-week paid adoption leave
- Work-life Works! (WoW!) Fund

9

Messages within Family Policies

- Procreation within legal marital unions
- Promote large families – three or more children privileged
- Encourage women to remain in the labour force

- Incentives
 - Tax benefits
 - Housing grants & priority allocation schemes
 - Child care options & leave benefits

10

Government Policies – *Will they work?*

- Do pro-family policies address root cause of ultra-low fertility?

11

Macro Factors & TFR

- Multiple regression model predicting TFR using percentage growth in economy,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TFR correlated positively with economic growth + negatively with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Adjusted R-square = 56.3%

12

Awareness of 2004 Pro-Family Government Policies

- 39% Yes, I have read up on them
- 37.1% Yes, I heard about them but do not know the details
- 23.9% No, I have not seen the announcements

(n=1510)

13

2004 Pro-Family Policies

- 23.9% not aware of policies – concentrated among those with no children or 1 child
- Those with 3 or more children more likely to believe that pro-family policies will help increase the TFR
- Evidence suggests that pro-family policies may encourage those with 1 child to have more children, but not those with no children

14